

제국 시대의 대중운동

제국 논의와 관련하여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우선 제국이라는 문제설정에 대해서 제국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최근 미국의 전쟁도발과 더불어 이러한 입장은 힘을 얻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향으로 보아서 제국화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국을 현재의 세계지배체제로서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제국의 전면적 지배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대중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소홀하다. ‘제국과 대중’이라는 문제설정이 실종되고 제국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사실은 자율주의의 입장에서는 대중에 의해서 제국이 구축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말이다. 또한 ‘제국에 대항하는 대중’이라는 구도보다는 제국의 일방적 지배를 미국에 빗대어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부시의 일방주의에 대한 비난과 맞물리면서, 그럴 경우 대중에 의한 제국의 돌파라는 실천적 함의가 사라진다. 자율운동의 강점은 기존의 제도나 지배체제에서는 만들어 갈 수 없는 색다른 형태들을 만들어 감으로써 권력을 해체해 가는 것이다. 대중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대안적인 집단성을 구성해 가려는 것이다. 그런데 대중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제국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자율운동의 이러한 강점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 최악의 형태는 부시낙선운동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이 주체성 문제이다. 대중을 동력으로 보고 사회구성을 파악하려는 관점에서 보면, 자본에게는 노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위기이듯이, 제국에게는 대중의 존재 자체가 위기이다. 그리고 『제국』에는 위기론이 없다고 하는데 네그리를 비롯한 자율주의자들은 자본에 의한 자동적 위기가 아니라 대중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위기를 강조한다.

나아가 제국의 특성은 권력의 내재성이다. 즉 대중을, 자신의 적대자를 포획하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대중이 제국의 포획구도에서 빠져나가면 제국은 존립기반이 흔들릴 것이다. 이 탈주하는 성격을 지닌 대중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국을 돌파해 나가려는 문제설정에서 보면 대중의 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즉 자율적인 주체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지점에서 돌파해 나갈 수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1절. 전지구적 권력과 대중의 역능

이러한 문제설정에서 볼 때 제국의 권력, 전지구적 권력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제국에서 국민국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 국민국가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특히 국민국가는 자본에게는 촉진경계로서 역할하지만 노동에게는 훈육장치로서 작동하고 있다. 특히 초국적 자본을 비롯한 제국의 자본들에게 국민국가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북한이나 이란, 쿠바 정도가 자립성을 기반으로 생존해 나가면서 제국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국민국가들은 세계체제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계를 구성하는 단위들로서 자립하면서 전체 단위를 구성하기보다는 전지구적 구성의 피라미드 속에서 일정한 위계들에 편입되어 있으며 제국적 작동 속에 휩싸여 있다.

그러면 제국 권력, 전지구적 권력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자.

새로운 전지구적 권력은 무질서하고 심지어 혼란스럽기까지 한 일련의 통제 조직과 대의제 조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전지구적 구성 요소들은 광범위한 범위의 기구들(국민 국가, 국민 국가의 단체들, 그리고 모든 종류의 국제 조직들)에 분포되어 있다. 이 전지구적 구성 요소들은 기능과 내용에 따라 정치 기구, 재정 기구, 건강 기구, 그리고 교육 기구들과 같이 분류된다. 그리고 다양한 생산 활동이 이 전지구적 구성 요소들을 가로지른다.

전지구적 권력의 모습을 그 권력의 다양한 기구들과 조직들 속에서 분석해 보면, 각각 몇 가지 내부 수준을 지닌, 점점 더 넓어지는 세 층으로 이루어진 피라미드 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Hardt, M. and Negri A., 2001, 403-409).

피라미드의 좁은 정점에는 하나의 최강 권력이, 즉 전지구적인 무력 사용에 대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미국이 있다. 혼자 행동할 수 있지만 UN의 보호막 아래에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최강 권력이다(이번 이라크 전쟁에서는 달리 행동하여 제국주의라는 이름을 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유일한 지위는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확정적으로 설정되었고 걸프전에서 처음으로 입증되었다. 여전히 이 첫 번째 층 안에서 피라미드가 약간 넓어지면, 두 번째 수준으로, 일단의 국민국가들이 주요한 전지구적 통화 수단을 통제하며 따라서 국제 거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 국가들은 일련의 조직체들—G8, 파리와 런던 클럽, 다보스Davos 등—로 묶인다. 마지막으로, 이 첫 번째 층의 세 번째 수준에서는 군사적, 재정적 수준에서 헤게모니를 발휘하는 다소 동일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이질적인 단체들이 전지구적 수준에서 문화 권력과 생체 정치 권력을 전개한다.

명령이 세계를 가로질러 폭넓게 배분되는 두 번째 층이 그 바로 아래에 있다. 이

층은 주로 초국적 자본주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통해 확장해온 네트워크들 - 자본 흐름의 네트워크, 기술 흐름의 네트워크, 인구 흐름의 네트워크 등 - 로 구축되어 있다. 시장을 형성하고 공급하는 이러한 생산적인 조직들은 전지구적 권력의 첫 번째 층을 구성하는 중심 권력의 우산[보호막]과 보증 아래 횡적으로 확장된다. 초국적 기업들은 중심 권력의 견고한 구조를 활기 있게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자본, 기술, 상품, 인구의 전지구적 분배를 통하여, 초국적 기업들은 광범위한 소통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욕구를 충족시킨다. 따라서 세계 명령의 유일하고도 오직 하나인 정점은 초국적 기업들과 시장 조직들로 분절되어 있다. 세계 시장은 영토들을 동질화시키고 분화시키면서 지구의 지도를 다시 그린다. 여전히 두 번째 층에는, 종종 초국적 기업들의 힘에 종속되어 있는 수준에서, 현재 국지적이고 영토화된 조직들로 이루어진 주권을 가진 국민 국가들의 일반적 틀이 있다. 이러한 국민 국가들은 전지구적인 헤게모니를 가진 열강들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매개, 초국적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거래, 그리고 자신의 제한된 영토 안에서는 생체 정치적 요구들에 따른 수입의 재분배라는 다양한 기능을 한다. 국민 국가들은 전지구적 유통 흐름의 필터이며 전지구적 명령 분절의 조절자이다. 다시 말해, 국민 국가는 전지구적 권력으로부터 부의 흐름을 포획하여 전지구적 권력에 부의 흐름을 분배하며, 여전히 가능한 한 많은 주민들을 훈육시킨다.

피라미드의 맨 밑에 있는 가장 넓은 층은, 전지구적 권력의 배치에서 인민의 이해를 대표하는 집단들로 구성된다. 대중(multitude)¹⁾은 전지구적 권력의 구조들 속에 직접적으로 편입될 수 없고, 대의제 메커니즘을 통하여 걸러져야 한다. 많은 경우에 국민 국가들이 전지구적 권력 구조에서 인민의 대의제가 지닌 항의하는 그리고/혹은 정당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인민(people)을 대표하며, 대중을 대표될 수 있는 인민으로 변형시킨다. 특히 종속되거나 작은 국가들의 집합체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UN총회에서 수적으로는 다수자이지만 권력의 측면에서는 소수자인 종속적인 국민 국가 집합체들은 최소한 주요 열강들에 대한 상징적 제한과 정당화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 세계가 UN총회 회의장에서 그리고 다른 전지구적 포럼들에서 대표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여기서 국민 국가들은 자신들의 인민의 의지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국민 국가가 새로운 전지구적 배치에서 인민을 구성하고 대표하는 유일한 조직은 분명 아니다. 또한 피라미드의 이 맨 밑, 세 번째 층에서, 전지구적 인민은

1) 네그리가 말하는 대중은 흔히 '대중사회'라고 할 때의 mass가 아니라 multitude를 의미한다. mass가 무차별적이고 획일적이며 매체에 의해 구조되는 수동적인 측면이 강한 무리임에 비해, multitude로서의 대중은 특정한 지배장치에 의해 구조화되기도는, 자신들의 개별고유성(특이성)을 소통하면서 공통성을 키워 나가는 주체적인 사람들을 말한다. 또한 국민이나 인민이 국가장치에 포획되어 있는 성격이 강한 반면에, 대중은 국가의 포획장치에서 항상 미끄러져 나가면서 색다른 것을 구성해 나가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정부 기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최소한 국민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비교적 독립적인 다양한 조직들에 의해 더욱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대표된다. 이러한 조직들은 종종 전지구적 시민 사회의 구조들처럼 기능하는 것으로, 대중의 욕구와 욕망을 전지구적 권력 구조들의 기능 작용 안에서 대표될 수 있는 형식들로 바꾸어 간다.

그러한 조직들로서는 매체와 종교 제도와 같은 시민 사회의 전통적인 구성 요소들도 있다. 매체는 국가 권력과 자본의 사적 이익에 반대하여 오랫동안 스스로를 인민의 목소리라고 또는 심지어 인민의 양심이라고 해 왔다. 매체는 인민이 알고 싶어하거나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관점을 제공하면서, 정부 행동에 대해 더욱 감시하고 균형을 잡는다고 한다. 그러나 매체가 사실상 종종 한편으로는 자본으로부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진지 오래다. 종교 조직들은 인민을 대표하는, 훨씬 더 오래 지속되어온 비정부 제도의 부분이다. 종교 근본주의가 국가에 대항하여 인민을 대표하는 한, 아마도 종교 근본주의의 성장은 이러한 새로운 전지구적 시민 사회의 구성 요소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종교 조직들이 국가에 대항할 때, 그것들은 종종 국가 자체가 되는 경향이 있다.

제국에서 가장 새롭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세력들은 비정부 기구들(NGOs)일 것이다. NGO를 인민을 대표하고 국가 구조들로부터 분리된 채 그리고 종종 국가 구조들에 대항하는 인민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려는 모든 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지역적, 국가적, 초국가적 수준에서 작동한다. 따라서 NGO는 일련의 거대하고 이질적인 조직들을 함께 아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국이라는 맥락에서, 스스로를 대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표하려고 노력하는 일련의 NGO들이 있다. 인도주의적 조직들로 특징지어지는 이러한 NGO들은 현대의 전지구적 질서에서 가장 강력하고 두드러진 조직들에 속하게 되었다. 그들의 위임 통치권은 실제로 모든 제한된 집단의 특별한 이해를 진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지구적이며 보편적인 인간 이해를 직접적으로 대표한다. 인권 조직들, 평화 집단들, 의료 및 기아 구제 기구들은 고문, 기아, 대학살, 감금, 정치적 암살에 반대하여 인간의 삶을 지킨다. 이러한 NGO들의 활동은 생체 권력의 영토 위에서, 삶 자체의 요구들에 대처하면서 '정치를 넘어서' 제국의 작용과 일치한다.

이러한 대의제 메커니즘들을 뚫고 나서는 대중이 있다. 제국을 위기에 몰아넣는 대중. 대의적인 활동이 아닌 구성적인 활동을 만들어 가는 방향에서 말이다. 물론 대의제적인 틀 속에서 움직이지만 제국의 지배질서에 저항하면서 대중의 역능을 확장해 나가는 다양한 흐름들도 있다.

제국의 초코르드화, 집중화 방식에 대항하는 반세계화투쟁을 비롯하여 특이한

(singular) 욕망(개인적 그리고/또는 집단적인)을 쫓피우게 하는 새로 나타나거나 이전부터 존재했던 모든 주변적 집단, 소수자들, 자율 운동의 증식, 그리고 국민국가라는 권력구성체를 전복시킬 새로운 형태의 사회 집단(예를 들어 사파티스타)의 출현을 목격할 수 있다(Guattari, 1980a, 101).

2절. 제국시대의 대중운동

제국 시대의 대중 운동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은 반세계화운동이다. 반세계화운동과 관련하여 세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세계화를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고 하는 말을 네그리가 인용한다. 이를 두고 반세계화투쟁은 반동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네그리 얘기는 세계화, 전지구화의 경향을 인정하고 그것을 되돌리기보다는 촉진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이것을 곧바로 세계화 찬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네그리가 세계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네그리가 친세계화를 주장한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물론 네그리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세계화를 가속화시킬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초국적 자본 주도의 세계화에 대한 대항세계화, 노동이 주도하는 세계화를 염두에 두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세계화라는 경향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색다른 세계화, 대안적 세계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흔히 반세계화 시위를 바라볼 때에도, 시위대들이 단순히 세계화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세계의 피착취자들과 운동세력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봉건제보다 낫고 제국화가 제국주의화보다 낫다는 얘기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두고 제국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시대를 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려고 하였을 때 친일본자라고 곧바로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봉건제보다 자본주의는 좋은 것인데 제국주의가 자본주의를 가져왔다고 하면 식민지 지배를 찬양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자본주의로 규정하는 속에서 노동자 주체의 중심성을 파악해 내려던 문제의식은 사라져 버리고 만다. 지배체제의 성격을 규정할 때에는 그 체제의 전복세력의 성격을 파악하려는 것이 맑스주의적 분석태도가 아닌가?

맑스주의적 분석태도에서 볼 때, 세계화는 자본의 세계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세계화를 포함한다. 제국 시대에 초국적 자본을 비롯한 자본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은 노동자들의 이동과 난민 문제와 함께 가는 것이다.

제국 권력은 훈육메카니즘, 포획메카니즘을 통해서 대중의 활동을 자신의 이윤추

구에 맞추어 가려고 한다. 이러한 초코드화하는 제국 권력에 맞서서 대중은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해 나간다.

여기서는 제국 시대의 대중 운동을 반세계화운동, 자율운동, 소수자운동, 보이지 않는 운동 등으로 나누어서 고찰해 본다.

1. 반세계화운동

반세계화운동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공세에 반대하는 전지구적 사회운동·민중운동을 가리키며, 초국적 독점자본과 제국주의국가(G8과 EU),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등에 대한 투쟁만이 새로운 대안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인식의 확산에 기반한 것이다(원영수, 2003, 12). 시애틀 전투(1999년 11월)를 계기로 폭발한 반세계화운동은 세계화의 주도세력 및 국제기구에 대한 포위·타격 투쟁의 흐름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안에 대한 토론과 논쟁의 장으로서 세계사회포럼의 흐름이라는 양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물론 9·11을 계기로 하여 반전운동과 결합하여 전개되고 있기도 하다. 반세계화운동은 그 전개과정에서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저항의 세계화’를 보여준다. 또한 세계사회포럼의 활동에서 보이듯이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있다. 그리고 세계사회포럼은 내적인 조직원리로서 탈중심화된 방식으로 상호연결시키는 다원적이고 다원화된, 비종파적, 비정부적, 비정파적 구조를 지닌 조직과 운동을 지향한다(이종희, 2003, 69). 이러한 반세계화운동의 활성화 속에서 새로운 국제주의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국가 단위들의 결합관계로서 국제주의를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노동자들의 불만과 요구를 제도화된 신자유주의 지배구조 내지는 신자유주의적 지배연합 속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과 노조 등을 통해 국가로 대변할 수 있는 길이 막힘에 따라 대체로 그러한 제도화된 틀을 깨고 나서는 ‘직접적인 대중투쟁’의 형태로 전개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로 인해 투쟁은 대체로 사민주의정당과 노조상층부의 통제를 넘어서는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고, 노조상층부가 이들의 조직으로부터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마지못해서라도 투쟁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김세균, 2003, 160-168).

더욱이 반전운동의 전개과정에서 9·11 직후 출범한 영국의 ‘전쟁저지연합’은 정치적 좌파, 평화운동, 노조운동, 무슬림 단체 등 광범하고 다양한 세력들을 결집시켰다. 그 조직은 “인종의 벽을 뛰어 넘어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 덕분에 각

세력은 전통적 지지기반 외에 더 광범한 사람들과 접촉하기가 쉬워졌다. 한 번에 수십만 또는 수백만 명이 참가한 ... 런던·로마·바르셀로나 시위에는 노조원이 사상 처음 무슬림과 함께 행진했다. 또한 은퇴한 연금생활자, 중고등학생, 조지 부시 일당이 두려워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중간계급, 흑인, 보통의 여성, 동성애자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도심지를 행진했다.”(최일봉·김하영, 2003, 122)

반세계화운동의 이러한 전개과정은 바로 대안적인 세계화의 그림을 그려준다고 할 수 있겠다. 반세계화운동은 주체의 측면에서 본다면 요구강령으로서 전지구적 시민권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그림과 관련하여 지방화, 지역운동, 민족(국민)운동 등에 대해서도 그 운동을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무조건 반동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지방, 지역, 민족(국민)에 고정되는, 폐쇄되는, 고립화되는 방향의 운동을 문제삼아야 하지 않을까? 지역운동이 자신의 지역을 특화하지만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운동을 위치짓는 것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또한 세계적으로 다양한 운동들이 여기 저기서 (산발적으로?) 터져나온다. 이러한 운동들의 공통된 특성은 제국의 훈육메커니즘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매개 없이 직접 제국에 대항한다. 물론 코민테른 시절처럼 단일한 이념과 조직의 틀과 명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 점에서 갈등이 생긴다. 레닌주의를 결코 벗어나려 하지 않는 사람들(예를 들어 알튀세르)은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버리지 않는다. 운동에서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이념의 문제이고 조직의 중심성 문제로 된다. 여기서 문제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대표적 이데올로기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대안적인 세계화를 추구해 나가는 반세계화 운동에서는 하나의 헤게모니적인 이데올로기(이념)를 상정하지 않는다. 일단 다양한 이데올로기의 공존을 일정한다. 그러나 운동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은 아니다. 왜 스피노자, 마키아벨리 등을 끌어들이고, 욕망이나 정서에 대해서 말하는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운동을 벗어나려는 몸부림으로 보인다. 네그리가 운동에 소통이 부족하다고 할 때 알튀세르주의자들은 레닌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한다(지젝도). 새로운 횡단주의적 윤리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것을 제기하는 것이지 다시 이데올로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2. 자율운동

제국 아래에서 기존의 운동들은 여전히 지속된다. 물론 그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말이다.

기존의 노동자운동은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노동자의 힘을 증대시키는 운동이다. 노동자운동은 자본의 지배 하에서 산노동의 힘을 증대시키는 운동이다. 그런 점에서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변형시켜 가려는 운동이다. 자본의 착취에 대항하여 노동자계급의 힘을 키우려는 운동인 것이다. 또한 자본의 착취에 대항하여 노동자계급의 재생산을 보장하고 보호하려는 운동인 것이다. 그럼으로써 노동자계급의 재생산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운동이다. 노동자계급의 재생산 기반 확보는 공공영역의 확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조중심의 노동자운동은 비보장된 노동자를 악화시키고 보장된 노동자를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제도화되면서) 비보장된 노동자들을 양산함으로써 결국은 노동자계급 전체의 힘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노동자운동은 비보장된 노동자층들을 포괄하는 과제가 마주하게 된다. 자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동자층의 재생산 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과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즉 네그리식으로 표현하면 사회적 공장(공공영역)의 기반을 이루는 사회적 노동자의 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과제가 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공공지출 투쟁과 생계임금(사회적 임금)을 제기하게 된다. 공공지출 투쟁과 사회적 임금의 확보는 광범한 의미에서의 노동자계급의 재생산 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며 이것은 공공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국시대에 노동자계급운동이 전진적으로 나아가려면 보장된 노동자의 이익에 집착하는 것에서 국가장치에 포섭되는 것에서 벗어나면서, 노동자계급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도정에서 노동자계급이 확보해온 자치성으로서 공공영역은 자본권력에 대항하는 물질적 전제조건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영역 투쟁의 의미를 좀더 살펴 보자.

1) 공공영역 투쟁: 자율운동의 물질적 전제조건

전통적인 맑스주의에서는 국가를 장악함으로써 권력을 장악하고 부르주아지의 '물질적 토대'를 전체 인민을 위해 새롭게 건설해 나갈 것을 주창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논제로 떠오른 것이 사회화 논의이다. 사회화·국유화에 대한 요구는 사유화에 대항하여 소유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사회화 논의의 기본 골격은 독점자본 및 기간산업의 사회화(국유화) 및 노동자(민중) 통제, 그리고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노동자계급의 권력장악투쟁(국가장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장악 테제에 대해 반대할지라도 사회화 투쟁이 지닌 의미 자체를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맡기려는 신자유주의적 기획에 경종을 울리며, 기존의 공공영역(한국의 경우 흔히 공기업)이 지닌 부분적인 공적 성격을 유지하려는 투쟁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기업의 경영성 논리에만 입각한 구조조정 정책에 대항하여 노동자들의 재생산 기반을 넓히려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사회화 투쟁은 해당 기업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이 자본(국가)과의 대결구도에서 자신의 재생산기반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싸움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기존의 공공영역이 지닌 가장 큰 의미는 노동자계급의 재생산 기반을 확보하며, 더 나아가 대중 전체의 재생산 기반을 안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의해 공공영역이 사유화되고 있는 양상은, 서구에서는 68혁명 이후 확보되었던 노동자계급의 재생산기반에 대한 자본의 공격이며 우리의 경우는 IMF를 계기로 한 제국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서구에서 1970년대, 1980년대에 전개되었던 공공지출 투쟁은 세금을 노동자계급을 위해 사용하려는 투쟁이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공공영역을 노동자계급이 어떻게 전유할 것인가 하는 투쟁이었다(Negri, 1997, 16-69).

최근 세계시장 이데올로기 속에서 자본의 전지구화를 향한 경향은 특히 국가를 매개로 한 공공영역을 축소시켜 왔다. 일단 공적인 것the public(공기업)의 기초인 공통적인 것들the commons(예를 들어 주민들의 에너지의 값싼 이용)이 사적인 사용을 위해 몰수되고 아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게 되며, 공적인 것은 심지어 개념으로서도 해체되고 사유화된다. 그렇게 되면 공통적인 것들을 만들어가는 대중의 참여는 막히게 되고 공통적인 것에 기반한 공적인 것은 사적으로 운용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 우리는 노동하는 대중으로서 더욱 급진적이고 심오한 공통성commonality에 참여하고 있다. 사실은 우리가 소통과 사회적 네트워크들, 상호 작용적 서비스들, 그리고 공통 언어들로 구성된 생산 세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현실은 생산되고 소비되는 물질적 대상들에 의해 규정되기보다는 공동 생산된 서비스들과 관계들에 의해 규정된다. 따라서 생산한다는 것은 점점 더 협동과 소통적 공통성들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Hardt, M. and Negri A., 2001, 394-396).

여기서 국가장치(자본)의 포획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공통성을 추구해 가는 노동하는 대중을 떠올리게 된다. 더 나아가 전지구적 권력으로서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율적 공간을 구축해 가는 대중의 상을 떠올리게 된다.

대중은 스스로 자신들의 소통을 넓혀갈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 나간다. 기존의 공공영역을 넘어서 새로운 공공영역은 대중이 내재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공

통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위에서 나타날 것이다. 노동자들이 자본과 싸움을 하면서 따낸 혹은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틀(노동조합일 수도 있다) 속에서 자신들의 소통의 장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며, 동성애자들이 국가와의 싸움에서 확보한 가상공간상의 모임을 통해 자신들의 담론을 공공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공공영역이 국가에 의해 관리된다면, 그것은 대중의 자율적 역능을 억누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중은 자율적 공간의 창출 과정에서 국가와 충돌하게 될 것이다. 제국의 훈육장치로 변한 국가는 훈육을 거부하는 대중과 그들의 협동 장치인 새로운 자유의 공간을 압박하고 파괴하려고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공간을 지키려는 대중의 저항에 부딪쳐 국가는 대중의 공간들을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제도화의 선은 제국의 지배세력들에 의해 윤곽이 그려질 것이다.

이 지점에서 공공영역의 내용으로서 공통성을 얘기하고 그 공통성을 담지하는 대중을 그 주체로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들을 포함한 대중이 현실에서 지니고 있는 투쟁획득물(예를 들어 복지제도)이 지닌 불가역성, 노동조직의 집단성, 생산적 주체성의 사회적 특징(소통 및 협동) 등은 공공영역의 내용을 이룬다(Negri, 1997, 239-252). 다시 말해 대중이 획득해 온 자치성이 공공영역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공공영역은 해방의 장을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들, 기반이 된다. 네그리와 하트가 제기하는 전지구적 시민권, 사회적 임금권, 재전유권의 실현 등은 공공영역의 내실을 대중의 입장에서 채워가려는 방식일 것이다.

국가에 포섭된 기존의 공공영역은 새로운 자유의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자율적 조직화의 수동적 전제조건일 뿐이다.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새로운 공공영역(예를 들어 사회센터)의 창출은 자율적 조직화의 능동적 전제조건일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를 압도하는 제국 권력에 대항하는 대중의 자율적 협동방식을 촉진시킨다. 대중이 획득해 온 자치성으로서의 공공영역은 자율적 조직화의 토대가 된다(윤수종, 2002, 216-219). 이처럼 공공영역 위에서 집단적인 생산적 주체들을 구성하고 색다른 자유의 공간들(미시코문들)을 창출해가는 것은 구성권력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이 구성권력의 과정이 바로 공산주의로의 이행일 것이다.

2) 자율운동

자율운동은 대중의 역능과 권력의 관계를, 역능을 지닌 대중의 입장에서 정립해 가려는 시도이다. 대중의 역능을 확장하여 지배 권력(국가)을 약화시켜 가는 것이다.

자율주의자들은 ‘대표는 없다’라는 구호 아래 조직형태를 생각하기 때문에 대표성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 인간의 창조력, 잠재력을 최대한 확장할 수 있는 조직형태 및 작동원리들은 무엇일까 하는 것에 관심을 쏟는다. 다양한 집합체들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그것들이 결국은 거대한 사회적 지배장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과정을 조직화할 수 있는 방식들을 모색해 나가려는 것이다. 따라서 베버의 관료제 이념형이나 레닌의 민주집중제(전위당론)에 대한 발본적인 비판의 성격을 지니며 대안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간다.

서구에서 이러한 자율운동의 흐름은 68년운동 흐름에서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자율운동이 고조되었던 이탈리아의 경우를 약간 살펴 보자(윤수종, 1996, 63-94). 1968년 이후 이탈리아의 사회운동조직들은 여전히 집중화된 지도력[레닌식 민주집중제]에 활동을 맞추고 정치적 전위인 공장노동자들에 배타적으로 집중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1970년대 중반에 여성운동을 비롯한 소수자운동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로 인해 기존의 방식으로 활동하던 조직들의 ‘운동의 위기’가 있었다. 붉은 여단은 은밀하고 엄격하게 위계화된 구조를 지니고 군사전략을 추구하였다(민집제의 강화방향). 이에 반해 네그리는 ‘아우토노미아(Autonomia) 영역’의 형성에 참여하였다. ‘아우토노미아 영역’은 노동자운동을 당시 막 힘을 얻은 다른 운동들, 특히 여성운동과 연결시키는, 비위계적 조직형태를 추구하는 독자적 집합체들의 연결망이었다.

이러한 흐름 위에서 나타난 자율 운동은 자율성, 자주관리, 자기조직화에서 출발한다. 더욱이 이 자율성은 의식을 앞세운 자율성이 아니다. 노동거부를 통해 다양한 집합적 주체성을 형성해 내면서 기본 관계를 변형해 갈 수 있는 자율성을 의미한다. 그 위에서 비노동의 영역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지배하지 않는 영역에서, 자본에 대립하는 모든 사회세력들 및 노동자계급이 창조하는 다양한 가치생산영역들을 만들어가는 자기가치증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특히 여기서는 다양한 주변자들, 소수자들이 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낸다. 고정된 부의 축적이 아니라 자본의 재생산권력과 분리된, 사회의 자율적 재생산역능을 규정하는 욕구들, 즐거움들, 그리고 실천들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의 현실적인 모습은 기존의 관계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색다른 공간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남성들과 분리하여 여성적인 주체성을 정립하고 그 위에서 독자적인 공간으로서 여성센터를 만들어 가는 이탈리아 여성운동의 흐름은 바로 자신들의 절대적 자유의 공간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여성운동 안에서 레즈비안 여성들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여성들 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분리주의적 실

천 속에서 다시 자신들의 고유한 공간을 만들어 간다. 물론 그 공간 안에서 자율성에 기초한 관계가 정립되고, 점차 다른 공간들과의 교류를 확대해 간다. 이러한 미시코문들은 처음에는 폐쇄적인 것처럼 나타나지만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미시코문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들이나 조직들이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1990년대 들어 다양한 사회센터의 등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 독일을 비롯하여 북부 유럽에서 전개된 자율운동의 흐름도 이와 비슷하다. 자율적 여성운동, 반핵운동, 점거운동 등에서 나타난 새로운 공간 만들기는 기존의 권력정치학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Katsiaficas, 2000). 주변화된 층들이 국가체계가 부여한 지배원리에 대항하여 사회의 일부 공간을 점거하여 살면서 자신들의 고유한 내부규칙을 만들어 간다. 예를 들어 국가는 ‘모든’ 마약을 금지한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마피아와 경찰은 경성마약을 둘러싸고 엄청난 마약상승작용을 일으킨다. 이러한 국가와 마피아의 공모에 대항하여 거의 대부분의 자율적 코문들이 마리화나와 같은 연성마약(쌈 마약)을 값싸게 공급하고 히로뽕 같은 경성마약(죽음 마약)을 금지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경찰과 마피아에 대적하여) 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이다.

아우토노멘을 축으로 한 독일의 자율운동은 1980년대와 같은 걱정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체제에 철저히 반대하는 운동으로 남아 있다. 지금은 물론 약화되었지만 그 불꽃은 재를 남기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가 운동을 생각할 때 반체제적인 근본적인 변형 운동으로서 재고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국의 시대에 모든 것이 제국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상황에서, 힘들고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교외로 나가는 생태주의적 도피가 아니라, 거대 도시의 가장 깊은 안쪽에서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려는 운동으로서 말이다. 향수에 젖어 체 게바라를 바라보기 보다는 이 현존하는 탈근대적 게릴라들에 주목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윤수중, 2003, 135).

자율운동은 이처럼 색다른 삶의 형태를 추구함으로써 표준화하고 획일화하려는 지배권력에 대해 가장 격렬하게 싸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운동이 제도화되고, 권력은 운동들이 제기하는 것들을 국가장치 안에 포획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자율운동은 그 표준을 거부하고 운동의 지형도를 넓혀줌으로써 다른 다양한 운동들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한다.

자율운동은 운동집단 내부의 자율성과 비위계화를 지향한다. 주변층으로부터 시작된 자율운동은 내부의 주변을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과정에서 소수자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소수자운동과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율운동은 또한 국가권력의 장악이 아니라 색다른 삶의 형태를 창출함으로써 국

가권력의 지배력을 약화시켜가며 최종적으로 국가를 사멸시키려는 것이다. 즉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유로운 공간을 창조하면서 내부적 위계를 해체해가려는 것이다.

3. 소수자운동

자율주의는 지배권력에 대해서 독자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아래로부터의 사회 구성원리를 강조한다. 기존의 맑스주의도 이러한 대중의 관점을 견지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 아래가 다시 중심화되고 권력화되는 것이었다. 노동자계급 안에서 순수한 주체를 뽑아내려다가 여타 다양한 주변층들을 배제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노동자계급 안에서 주변성에 착목하는 것이 노동자계급의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고리가 된다는 인식에 이르게 된다.

이 주변성을 담아내면서 노동자계급 전체의 자율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이 자율운동의 출발이었다. 예를 들어 노조운동 안에서 여성이나 비정규직을 배제해 나가면 결국은 노조가 자본(사용자)과의 싸움에서 힘을 잃게 되고 자신의 자율성을 확보해 나갈 수가 없게 된다. 내부의 주변성을 포괄해 나가면서 외부와 횡단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때 자율성은 더욱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노동자계급이 획득해온 자치성(공공영역)을 기반으로 삼으면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운동은 자연스럽게 소수자운동과 연결된다.

소수자운동은 노동자계급 안의 주변층뿐만 아니라 사회의 주변층들에서 나타나는 운동이다. 소수자운동은 주변을 강조하고 중심을 해체함으로써 전체 지형도를 바꾸고 소수자 집단 자체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자율성을 확장해 나가려는 운동이다. 따라서 소수자운동은 바로 자율운동과 손을 맞잡고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소수자운동은 표준화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및 집단들이 자신들의 자율성을 지키고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윤수종, 1999, 99-124).

소수자권익보호운동이 소수자의 권익을 방어적으로 지키자는 방향에 있고 다수자의 지배를 전제로 한다면, 소수자운동은 다수자의 지배 영역을 축소해 나가기 위해 자신의 색다른 삶의 방식을 개발해 나간려고 한다. 당연히 다수자의 지배영역과 충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시민운동은 정치적 지배에 대해 시민적 자율성 영역을 확장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상에 집착한다. 특이성이 무시된 개인들로서 시민에 의거하면서 다수의 공통성을 찾아서 운동화하려고 한다. 국가권력을 부드럽게 만들면서

말이다. 그에 반해 소수자운동은 특정한 사람들 및 집단들의 특성에 기반하면서 그들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오히려 긍정해 나가려고 한다. 개별자들의 특이성을 표준화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의 차이를 극대화하면서도 오히려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소수자들을 특정한 틀에 묶으려는 즉 그들을 포획하려는 제국 및 국가와 충돌하게 된다.

소수자운동에서 강조하는 차이의 논리에 대해서 기존의 맑스주의적 사고방식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차이의 논리에 근거해서 어떻게 연대하고 점점 거대해지는 적을 공격하고 파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구성권력의 전략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차이의 논리를 강조한다고 해서 공통성을 만들어 가지 못하란 법이 없다. 공통성을 동질성으로 이해하니까 그런 것이다. 개별자(특이성, singularity)들이 서로의 동질적인 측면(사실은 추상적인 공통성)을 모아서 어떤 대표나 매개체에 그것을 위임해야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존의 대표제 논리이자 구성방식에 대한 사고였다. 이 경우 개별자의 특이성은 무시되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낸 공통성은 개별자들의 소통을 넓히기보다는 좁히고 단조롭게 만든다. 그 공통성은 개별자들이 지닌 동질성의 산술적 합계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3의, n번째의 것을 만들어 낼 수 없을 것이다.

차이의 논리에 입각한 스피노자적 소통의 정치는 바로 차이를 넓혀가면서 공통성을 만들어 감으로써 소통폭을, 공통성을 더욱 넓히려는 것이다. 점점 더 달라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특이화)에 대해 왜 생각하지 못하는가? 동일해져야만 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달라짐으로써 새로운 것들이 구성될 가능성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당이나 국가, 혹은 국제적 기구들 같은 매개체는 바로 이러한 생성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어떤 경우에는 억압하기 때문에, 경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로부터 더욱 더 이탈하는 운동(분권운동이 아니라), 당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운동을 통해서 대중의 구성의 폭과 가능성을 넓히는 '구성권력'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수자운동은 자기정체성 찾기에서 출발하여 고유한 자유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에 있다(윤수중, 1999). 여기서 대안운동과 만나게 된다. 물론 대안운동 가운데는 현재의 지배체제를 거부하지만 과거의 생활이나 더 억압적인 방식으로 되돌아가려는 것도 있다. 기존의 지배적 생활방식을 거부하고 색다른 생활방식을 실험하면서 내부의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대안운동은 바로 소수자운동의 발전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소수자 운동의 사례 가운데 자기정체성을 강하게 확인하고 나오는 운

동은 성적 소수자 운동이라고 생각된다. 점차 여성 성적 소수자 운동이 남성 성적 소수자 운동보다도 활발해 지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가상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공간만들기를 하고 있다. 성적 소수자 운동은 기존의 표준화된 인식과 공간에 새로운 것을 덧붙이는 운동이라고 생각된다. 장애인 운동에서 제기하는 이동권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에 비해 대안학교 운동 같은 경우 그런 부가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교육의 방향과 관련하여 하나의 준거를 새롭게 제기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공교육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교육활동을 대안학교의 운영 방식이나 교육활동에 비추어서 사고하고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대안학교운동은 새로운 준거를 만들어 나갔다고 할 수 있겠다.

4. 보이지 않는 운동: 생체정치적 투쟁

이상의 운동들이 제국 안에서 가시적인 것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운동들도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제국을 휘젓고 있는 대중매체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대중의 은밀한 움직임들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척도를 벗어나고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가상공간상의 운동을 이야기 할 수도 있고 탈주와 생성을 얘기할 수 있게 된다.

초코드화하는 제국권력은 모든 활동을 자신의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운동을 넘어서 권력이 미치는 각 분절지점들에서의 자기가치증식(정체성 확인)을 통해 자기가치증식(자율적 주체성의 구성)으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와 관련하여 대중의 은밀하고 일상적인 저항들은 우리 시대의 전지구적 지배 양상에 대한 생체정치적 투쟁의 표현이자 자기가치증식의 징후로 남아 있다.

자본은 바로 자신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을 자신의 이윤 메커니즘의 흐름 안에 끌어들이려고 한다. 사회적 공장 안에 있는,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주민을 자신의 지휘 아래 두려고 한다. 즉 자신에게 순응하는 주체성을 만들어 내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성을 생산하는 것은 사회의 다양한 시설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가족, 학교, 군대, 병원, 공장, 감옥, 네트워크 ... 등을 통해서 말이다.

이제 자본은 노동자들을 직접 통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포획장치에 걸려드는 주체들을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작용한다(Guattari, 2000, 230-252). 그리고 주체성 생산영역 자체가 자본의 이윤획득의 주요한 대상이 되었다. 주체성 생산영역에

서 생산의 특징은 내부적으로 직접 통제가 불가능하여 외부적으로 예를 들어 국가 권력(그 무서운 핵국가!)이나 도덕을 통해 또는 이윤획득논리나 자수성가 논리에 의해 통제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공장(이나 회사)에서처럼 자본과 노동의 대결이 직접적이지 않고 많은 경우에 대결은 그 주체들이 형성되는 공간인 각 설비(제도) 안에서 위계제 내부의 갈등으로 나타나며, 그 갈등이 심각해지면 각 설비 안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그 설비의 장(대표)이나 국가와 충돌하는 양상을 띤다.

주체성 생산과 관련한 투쟁은 조직화되고 제도화된 방식으로 집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결국은 개별 주체가 생산되는 것으로 (실은 집합적 주체성이지만) 귀결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거부행위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인 일상적인 문제로 현상한다. 그러나 그 일상적인 문제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주체성 영역에서의 투쟁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닐 것이며 오히려 대중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개별적인 투쟁이 축적되거나 집계되면 상당한 효과를 지닐 수도 있으며, 집단적인 가치증식과정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주체성 생산 영역에서의 투쟁은 기존 설비에서의 도주나 탈주로, 그 설비 안에서의 기존 훈육방식에 대한 거부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곧바로 새로운 자기구성방식으로 넘어가게 된다. 즉 내부에서 적대적 투쟁을 벌여 자신의 위상을 높이되 다시 기존 틀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틀을 아주 벗어나 색다른 생활방식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생활 자체를 둘러싼 투쟁, 즉 생태 투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몇몇 주체성 생산 영역에서 나타나고 나타날 수 있는 투쟁 형태를 간략하게 살펴보자(윤수중, 2000, 58-68).

시설별로 살펴보면, 먼저 공장에서의 명령에 대한 복종 거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은밀한 저항들을 찾아볼 수 있다.

가족에서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복종거부, 가출, 여성들의 가사노동거부, 결혼거부, 임신거부, 출산거부, 육아거부, 동성애자들의 생물학적 성(고정된 성)에 대한 거부와 이성애적 가족 거부 등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다. 가족은 주체성을 생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로서 자리잡아 왔으나 점차 해체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겠다. 이른바 ‘정상적’인 (부-모-자녀) 핵가족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이 아이낳기를 거부하여 자본에게 가한 타격을 생각해 보라.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수업거부, 등교거부, 자퇴 등이 속출한다. 학교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한국 고등학교는 병영을 방불케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 내부에, 수업 안에 있어도 다른 짓을 한다. 학업에 무관심한 태도가 그 전형적인 방식이다. 대학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실행되기도 했던 동맹휴업이 있었다. 최

근에는 프로젝트(돈)로 장악하려는 대학내 명령체계(지배)에 대해서 대학원생들의 프로젝트 작업 거부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군대는 ‘한번 갔다 와야 어른이 되는’ 참혹한 주체성 순화 장치이다. 물론 군대 내부에서의 구타를 참지 못하고 벌어지는 자살, 탈영, 명령거부 등은 흔히 있는 일이다. 더욱이 자신의 뜻에 따라 범법자가 되더라도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가혹한 처벌 속에서 죄수가 된다.

감옥은 푸코가 판옵티콘이라는 개념을 도출해낸 지독한 훈육장치이다. 사회의 특정 기준을 위반한 사람들을 감금해서 사회에 순응하도록 만든다고 하는데 오히려 교도소(敎盜所)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죄수들의 식사거부(단식), 징역거부, 통제거부, 탈출 ... 이 끊이지 않는다.

병원을 비롯한 다양한 보호시설들은 의사의 직업적 전문성(흰옷으로 표상됨)과 보호라는 구실 아래 사회의 많은 주변자들을 수용하고 있다.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은 탈출 등의 방법뿐만 아니라 집단적 저항을 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시설들에서의 은밀한 움직임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설들을 통한 훈육이 점차 내재적으로 실행된다는 것이다. 점점 더 미세하고 정교한 절차들을 통해서 주체들의 삶을 관리해 간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체들의 내재적 저항 또한 분출될 수 밖에 없다.

최근 들어서는 각종 시설 안에서의 훈육을 넘어서 어디에서나 훈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훈육시설들을 넘어서 훈육이 확장되며 특히 소통을 통한 훈육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소통네트워크 안에서 훈육에 대한 저항이 최근 인터넷상의 운동으로 종종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각종 투쟁은 예전부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온 것도 있으며 최근에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거나 새로운 영역에서 전례 없는 형태로 등장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주체성 생산 영역에서의 투쟁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개인의 정체성이 강조되고 개인적 활동이 곧바로 매개 없이 집단적 활동으로 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새로운 소통수단(컴퓨터 네트워크)을 매개로 쉽게 결집되어 저항운동의 형태로 드러난다.

그러나 권력에 압력을 가하는 성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주체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책정에서 (자본가가 규정한) 생산성이나 물가인상 기준이 아니라 노동자의 재생산비용을 기준으로 삼는 것, 이탈리아의 집세투쟁에서처럼 쫓아내겠다는 위협에 주부들이 자신들이 해온 가사노동이 자신들이 지불하지 않은 몇 달 치의 집세보다 더 많다고

반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발전논리, 전혀 다른 삶의 논리를 제출한다. 여기에서 자본의 적분으로서의 권력, 즉 국가와의 적대성이 드러난다.

제국 속에서 생체정치적 지배에 대한 생태적 투쟁이 더욱 중요해 지게 된다. 즉 생활방식을 둘러싼 투쟁이 중요해지게 된다. 각종 설비 및 제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체성 생산을 둘러싼 투쟁이 두드러지게 된다. 복종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각종 주체성 생산 방식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주체들이 자신들의 자율적 자기만들기 방식을 제기할 때, 다양한 권력 메커니즘들은 작동하기가 어렵게 된다.

자본의 지배를 거부하고 산노동의 생산적 주체성을 변형시켜 가는 것은 각종 설비 및 제도의 해체로, 장치의 작동 중단으로 이끈다.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자율성을 억압하는 관계방식에 항의해 나가면서 새로운 조직화를 시도해 나가야 한다. 거대한 사업장 파업을 통해서 자본이 아니라 노동이 동력임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이 동력이 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자기변형에 나서야 할 것이다.

3절. 제국시대 사회운동의 방향

국제적 테러와 국내적 테러를 통해 미국은 제국의 작동에서 매개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지배하려고 한다. 이것은 동시에 대중의 직접적인 공격을 가져온다. 대중은 횡단적으로 연결된다. 어느 곳에서 솟아오를지 모르는 대중의 공격은 그물망처럼 엮인 (제국과의) 적대전선을 가시화시킬 것이다. 특히 대중이 생성을 가져올 때, 흑인운동에서처럼 대안적인 삶 형식들을 만들어 낼 때, 제국은 그것을 포획하지 않으면 지배할 수 없다(위기에 빠진다). 노동의 움직임에 대처하는 자본의 재구조화처럼, 대중이 제국의 관리방식 안에서 새로운 금을 긋고 다르게 움직이는 방식을 만들어 낼 때, 제국의 위계제(지배)는 위기에 처한다.

그러나 대중은 제국의 지배방식과는 다르게 자기구성해 나가야 한다. 앞에서 말한 다양한 운동들을 통해서 대중은 제국 권력이 강요하는 삶과는 다른 삶의 방식들을 개척해 간다.

푸코의 권력의 미시물리학은 권력장악체제를 결정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정해 주었고 미시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물리학 위에서 권력보다는 저항을, 자본보다는 노동을 강조하였던 네그리와 가타리는 미시정치와 거시정치의 결합을 생각한다(가타리, 1998). 권력의 미시적 작동을 파괴하고 욕망의 미시적, 분자적 작동을 넓혀감으로써 권력을 점차적으로 해체해 가는 과정, 대중의 구성권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권력장악은 권력해체 과정의 부산물일 뿐이

지, 해결책이 아니다. 더욱이 국민국가 권력을 넘어선 제국의 권력은 ‘장악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다(네트워크 권력). 영원한 개량(분자혁명)을 통해 권력해체를 가져오는 지난한 과정을 추구하는 대중의 자기구성과정의 필요할 것이다.

주체와 관련하여 대중이라고 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스스로 색다른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능을 지닌 사람들 및 집단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 및 집단들이 만들어 내는 창의성을 포획하기만 하는 국가장치나 집단들은 대중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네그리의 논의와 『제국』을 전후로 하여 쓴 다른 글들을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가 자주 등장한다(Negri, 2003). 대중의 상을 새롭게 정의해 나가면서 ‘자기 노동에 기초한 가난한 자’에 착목하려고 한다. 근대시기에는 가난은 착취를 의미했지만 탈근대 시대에는 가난은 공통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쯤 되면 맑스주의의 계급개념과는 상당히 달라진다. 객관적 지위에 따른 계급 개념보다는 공통성을 만들어 가려는 집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또한 실천 주체들을 한정하거나 경계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나 체계의 경계나 한정들을 돌파해 나가는 측면(내부의 주변성, 외적으로는 노마드)을 강조하게 된다. 여기서 탈주와 생성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제국의 더욱 넓어져 가는 지배체제에 대항하여 자율적 주체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자율적 주체들의 코뮌들을 만들어가면서. 대중은 앞서 말한 운동들을 통해서 기존의 제도화된 틀을 넘어서서 제국 권력과 대결해 나가며 제국을 압박한다. 물론 그러면서 자신들의 자유의 공간을 확장해 간다.